

#### IV. 마치며

최근 독서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활동 수준은 낮고,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기초 기술로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독서행위란 매우 사적인 행위이지만, 책에 다가가게 하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기본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독서 가치와 욕구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의 독서를 위한 공적인 장치는 아직 높아진 독서 욕구를 해결하기엔 현재로서는 아직 역부족이다.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독서를 삶의 기술로서 삼을 수 있도록 독서의 본질에 바탕을 둔 건전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향전개와 개선방향

이 석 범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1. 들어서며

디지털 환경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영상문화도 크게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책과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활자매체의 독서시간은 세계 평균 독서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7년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의 연평균 독서율은 76.7%로 성인 4명중 1명은 1년에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특 집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독서현실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지식·정보기반사회 구축, 창의적 사고를 위한 독서의 필요성 증가 등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르익은 상황에서 독서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되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년)의 부속법 수준에 지나지 않던 독서진흥의 법적 위상이 독립 법제인 「독서문화진흥법」으로 거듭나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마련, 독서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각종 독서권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독서문화진흥법」은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상징성과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 법적토대와 내실을 다져간다면 풍요로운 독서문화의 미래를 만드는 데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독서문화가 국가, 사회적인 관심 속에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2007년 전개했던 ‘거실을 서재로’ 독서캠페인에 대해 살펴보고, 독서문화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2007 ‘거실을 서재로’ 독서캠페인의 내용 및 성과**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한 독서 캠페인으로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의 핵심은, 거실에 있는 TV와 소파를 안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서가와 책상을 놓아 거실의 쓰임새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독서운동과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독서를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운동, 독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운동은 많이 없었다. 그간 독서운동이 ‘책 속에 진리가 있다’ 라거나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다’ 식으로 추상적이었다면,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생활의 출발인 거실에서부터 가족이 책을 읽자는 구체성을 띠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이었다.

2007년 3월 5일 첫날만 신청자가 5천명을 넘었고 이를 만에 9000명을 넘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으로는 860여 통의 편지가 쏟아졌다. 접수 첫날 “정말 무료로 책과 책장을 나눠주느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묻는 문의전화만 1,000여 통이 넘게 걸려왔다. 캠페인을 후원하겠다는 개인과 단체의 문의도 쏟아졌다. 캠페인 홈페이지에 올린 신청자들의 사연은 가족문화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항상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해 거실을 독서실로 꾸미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따라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여태껏 제가 남편에게 해 온 잔소리보다 이 캠페인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이경원 씨) “늘 생각해 오던 일을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송경숙 씨)라며 신청자들 상당수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독서의 가치와 가족 간 대화를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시부모를 모시는 노희정씨는 “시부모님은 틈이 나면 TV를 틀어놓으시고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곁으로 가서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다”면서 “차마 시부모님께 TV보시지 말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사연을 적었다. 신청자들은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을 계기로 가족 간 대화를 되찾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대중문화의 일방적인 소비 공간으로 전락해 버린 거실을 사색과 대화의 공간으로 되돌리자는 이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독서운동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캠페인이 성공한 비결은 이와 같이 보통 사람들의 열망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라 하겠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은 매달 740가구에 책꽂이와 책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온 가족이 항상 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이야기하는 문화를 북돋우고, 더 나아가 책 읽는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스스로 다음 책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책장은 보급형과 맞춤형 두 가지 형태로 맞춤형 서가는 응모자의 형편에 맞춰 거실뿐 아니라 안방이나 부엌 어디든 서재로 꾸며주는 형태이며, 보급형서가(가로 세로 35cm, 깊이 27cm)는 이용자가 집 구조와 크기에 맞게 조립-구성할 수 있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졌다. 책은 출판협회에서 30여 명으로 구성된 ‘도서 추천인단’의 추천을 받아 매월 30권을 선정하고, 당선자들은 10만 원 범위 안에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의 대장정 동안 총 8만 9,094명이 응모했고, 9,510가구가 거실을 서재로 바꾸었다. 또한 350개 출판사의 책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고 총 7만 5천여 권이 지원되었다. 도서 구입비용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책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선일보가 전액 부담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했다.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사연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반 가정, 시설, 기관에 관계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사연을 보고 심사를 통해 맞춤형 10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보급형은 추첨을 통해 730가구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당선자를 발표했고, 익월 둘째 주까지 책과 책장이 배송되었다. 당첨될 때까지 매월 1회 다시 응모할 수 있었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에 신청한 8만 9,094명을 분석했더니, 30대 여성이 전체의 38.5%를 차지하며 호응이 가장 높았다. 대부분 초등학교생이나 중고생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거실 서재’ 만들기에 나섰다. 30대 남녀 신청자의 비율은 51.7%로 나타나 30대의 캠페인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응모자가 가장 많았고, 제주도까지 참여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 캠페인의 영향으로 거실을 서재로 바꾸었다는 사연들도 인터넷에 넘쳐났다. 또한 ‘거실을 서재로’는 아파트의 주거문화까지 바꾸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새 아파트 거실을 북카페처럼 꾸민 라이브러리 하우스를 개발하였고, 대림산업은 최근 거실과 서재 사이 벽체를 터서 책꽂이를 들인 신평면을 내놨다. 경기도지방공사가 2007년 9월초 남양주 진접지구에서 분양한 ‘자연앤’ 아파트 모델 하우스는 기존 TV가 놓였던 거

특 집

실 한쪽 벽면에 추가비용 없이 책장과 수납장을 설치해 거실을 서재로 꾸며주는 코너를 마련하기도 했다. 남광토건은 인천 계양 하우스토리 257가구에 기존 거실과 주방이라는 일반적 공간 대신 서재로 꾸며진 '리빙 라이브러리' 거실 등을 선보였다.

1년이 넘는 장기 캠페인이 지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열기를 유지하기 위해 두 달에 한번 꼴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거실을 서재로 실천체험수기 공모',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는 일본 큐슈 여행', '책이 있는 가족 풍경' '휴가지의 독서풍경' 사진 공모, 독서를 주제로 한 UCC 공모 등이 그것이다. 2008년 1월에도 평소 고마운 분들께 조선일보가 선정한 '2007 올해의 책' 3,000권을 선물하는 '고맙습니다' 이벤트를 가졌다.

환경재단은 '거실을 서재로'를 '2007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했고, 삼성언론재단도 제12회 삼성언론상 특별상 수상작으로 뽑았다. 이 모든 게 캠페인이 몰고 온 사회적 반향 덕분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가 펼쳐온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트렌드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이 한발 더 나아가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 운동이나 일본에서 시작된 '아침독서 10분 운동'처럼 전국적이고 상시적인 운동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부분의 독서운동이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일회적이거나 단기적 사업으로 끝난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 역시 어렵게 조성됐던 책 읽는 가정 분위기가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캠페인이 종료되었다.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의 경우 1년간 15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민간단체에서 이러한 비용을 몇 년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간단체들이 어렵게 조성한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속시켜야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이번에 발표한 독서문화진흥계획처럼 민간 독서단체 등을 연결하는 종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과 조직의 한계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는 독서운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3. 「독서문화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독서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출판계를 대신해서 감사드린다.

총 5장 15조로 구성된 동법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독서진흥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의 독서 정책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책 수립, 독서의 달 행사,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등이다. 이 법은 독서문화 진흥기본계획에 도서관을 비롯한 독서시설 개설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출판산업 진흥과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조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조문을 살펴보면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조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독서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법안에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이 우려스럽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 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여 실효성이 없었던 전례로 보아 <기본계획안>에는 좀 더 강력한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독서진흥 책무가 선언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노력해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 할 수 있다”는 선언적이고 권고조항 일색이다.

그동안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이 실효성 없는 결과를 낳은 가장 큰 이유는 담당 추진체의 부재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으로서, 전과 다를 것이 없는 심의기구가 아닌 독서진흥정책 사무를 담당하는 독서진흥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진흥위원회를 단순한 심의기구로 둘 경우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고 정부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도 수립만 되었을 뿐,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대상별 추진과제에 있어 지역, 가정, 초·중·고교, 직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학이야말로 왕성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있는 집단이고, 국가 지식문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것이다.

### 소외 계층 독서활동 지원에 관하여

동법은 “독서장애인, 소외 지역, 소외 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다. 소외 계층 독서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들도 균등한 독서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독서장애인이 소화할 수 있는 책, 소외 계층을 위한 책들도 만들어지고 보급되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출판사로부터 텍스트 파일을 납본 받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출판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지책으로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조치가 완벽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출판사에서 출판물의 파일을 제공할 경우, 현재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 단 한 장의 디스켓이 유출되고 해킹된다면 수십만 장이 복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스웨덴의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장애인용 도서를 제작 혹은 구매하여 일반도서 가격에 판매해주면 좋겠다. 일본의 경우처럼 1년에 몇 권까지는 수요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사회보장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대체자료의 수요증가는 출판산업 활성화와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기금조성 및 제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 집

4. 맺으며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방안들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 중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도서관, 민간단체, 출판·서점계 등의 협력체제 구축, 충분한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독서는 고도의 문화적이고 내적성장을 위한 활동이다. 따라서 독서의 문화적 실천은 자발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부는 독서활동에 대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전 국민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 내용을 검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 ‘책 읽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 찬 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 1-1. 책 읽는 나라의 생각하는 백성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하였다.(<사상계>, 통권 61호, 1958년 8월.) “모든 것의 밑이 뜻이요 모든 것의 끝이 뜻이다. 뜻 품으면 사람, 뜻 없으면 사람 아니. 뜻 깨달으면 얼[靈], 못 깨달으면 흙. 전쟁을 치르고도 뜻도 모르면 개요 돼지다. 영원히 멩에를 메고 멩돌질을 하는 당나귀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하는 백성’인가, 아니면 개나 돼지, 멩에를 짊어지고 멩돌질이나 하고 있는 당나귀일 뿐인가.

21세기 우리나라에 하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책 읽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책 읽는 나라’의 시민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시민, 생각하는 백성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다면 과연 우리 백성들이 행복해지는가.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 백성들이 배를 굶어서도 아니 되지만, 배만 불러서도 아니 된다.